

서울보다 땅 넓은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거비용은 얼마?

현행 시장 7억원·지사 15억원대…통합시장 선출시 2배 이상 증가 전망
서울시장 한도액 37억원…자금력 큰 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 될 우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물살을 타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상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출마예정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지역 정의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공고된 제9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의 경우 7억 2487만 7940원이다.

이는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액수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된 전남지

사 선거의 제한액은 15억 821만 2144원으로 광주의 두 배를 웃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현실화될 경우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선거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 광역시와 도, 특별시(서울)에 각각 다른 산식을 적용한다. 광주는 기준액 2억원에다 인구수를 반영해 비용을 산출하지만, 특별시는 4억원을 기본으로 한다.

만약 통합특별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기준 산식을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 광주·전남의 지난달 기준 총인구 316만 8829명을 적용하면 통합시장 선

거비용 제한액은 최소 15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남지사 선거비용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기존 7억원대였던 선거비용 한도가 단숨에 15억원대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이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 반경이 전남 전역으로 넓어지는 부담에 더해, 막대한 선거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령상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산식을 적용해 15억원대로 추산되더라도, 이는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6·3 지방선거 기준 37억 2176만여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는 낮지만 면적은 훨씬 넓은

도농 복합 형태의 통합특별시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특별시 산식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운동 범위가 광주 도심에서 섬 지역을 포함한 전남 끝자락까지 확대되는 만큼, 이동 비용과 조직 운영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후보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참신한 신인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주무 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방선거 규정이나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제한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몸통’은 커졌는데 ‘urt’은 그대로인 협정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특별시는 기존의 광역시나 도와는 다른 ‘제3의 행정체계’로 봐야 한다”며 “단순히 서울특별시 기준을 차용하거나 기존 도 단위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보다는, 통합된 행정 구역의 특성과 확장된 선거 운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선거비용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영 선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점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의 세밀한 설계까지 함께 이뤄져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여의도 보리핑

김원이 의원 ‘산업 스파이’ 처벌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5일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 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늘고 있음에도 평균 형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징역과 20

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7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국가 산업 경쟁력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징수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징역·벌금형을 전면적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유출 범죄가 ‘저위험·고 수익 범죄’로 인식되지 않도록 처벌의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픽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원 투표’ 뛰운 鄭, 전 의원 회동 착수

민주 당대표, 초선 이어 중진 등 연쇄 간담회 계획…‘합당’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자 당내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서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두고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는 비판이 계속되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반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5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10일 재선 의원 간담회를 한다. 3선 의원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선수(選數)별로 의견을 듣고,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통해 전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17개 시

도당 자체 토론회도 여는 한편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잔반 투표를 하면 당론이 분열된다”고, 공개 토론회에 대해선 “(반발하는) 의원들 좌표가 찍힐 것”이라고 각각 지적하면서 반대했다. 그는 “(합당) 과정이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지도부가 (상황)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며 “잠시 논의를 멈추고 숙의 과정을 진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연주 최고위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며 정 대표가 이제껏 정부 초기에 자신의 의제를 띄우고 있다고 비판한 뒤 “조국 대표도 본인이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조국당 안에서 행보하는 것은 상관이 있는데 우리 당에 와서 대권 행보를 한다고 하면 당이 얼마나 시끄럽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도 SBS 라디오에서 “통합과 합당의 길이 맞고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본다”라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지원 사격을 이어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정현 “호남을 국가 전략 거점으로”

국힘 광주·전남 미래산업 전략특위원장, 전력 특례 도입 등 제시

국민의힘 광주·전남 미래산업 전략특위 사령탑을 맡은 이정현 위원장이 “호남을 기존의 정치적 ‘배려 대상’에서 탈피시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책임지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더 이상 정치권의 시혜나 위로를 기다리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호남은 풍력과 태양광은 물론 원전, LNG, 앙수발전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정 전력 풀세트’를 갖춘 에너지 보고”라고 진단했

다. 다만 “문제는 풍부한 자원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기업과 산업 시스템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을 이념 논쟁이 아닌 철저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AI·데이터 전용 전력 특례 도입’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보상 제도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학과 기업을 잇는 계약학과를 대폭 늘리고, 산업 용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규제 킬러제’를 도입해 기업 투자의 장애물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증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